



태풍 이후, 철저한 가축관리로 추가 피해 줄여야

농촌진흥청, 시설파손 복구·인성 질병 대비

농촌진흥청은 태풍이 지나간 후 가축 질병 발생과 사료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한 비바람으로 축사 시설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후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침수나 수질 오염으로 인한 가축의 수인성 질병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축사 주변 울타리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축사 내 구멍 메우기 작업을 실시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 축사가 빗물에 잠겼다면 침수됐던 시설에 남아있는 유기물 등을 깨끗이 씻어 낸 후 소독제를 흘뿌려 준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축사에는 가금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효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 염소 등 우제류 축사에는 구제역에 효력이 있는 소독제를 쓴다. 단, 돼지농가에서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모두 효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먹이통과 물통은 깨끗하게 씻고, 가축에게는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를 제공할 때는 정수용 염소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가축의 건강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사료 먹는 양과 움직임이 줄어든 가

축은 가까이에서 체온, 호흡, 분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질 좋은 풀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고 비타민, 광물질 등을 추가로 급여해 가축의 면역력 관리에 노력한다. 축사는 충분히 환기해 적정 습도(40~70%)를 유지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축사 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퇴비저장시설과 분뇨처리장 등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한다.

지대가 낮은 사료작물 재배지나 초지가 물에 잠겼을 때는 바로 배수로를 확보해 물을 빼낸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여름 사료작물은 수확 작업이 가능할 경우 빨리 베어서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방지한다. 초지의 목초는 그루터기의 높이를 15cm 정도로 잘라준다. 목초 수량이 많다면 비가 그친 후 수확해 담근 먹이로 만든다.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피해야 목초 피해나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태풍이 지나간 뒤 보다 철저한 축사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아픈 가축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2020. 9. 4]

October 2020

정부, '오리사육 휴지기제 대상농가' 선정 추진

계열화업체 의견 반영... 농가·업체·지자체 모두 '반발'

정부가 올해부터 계열화업체 의견을 반영해 오리 사육 휴지기제 대상농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가·계열화업체·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2차례 화상회의에서 '2020년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 지침(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계열화업체가 지자체에 오리사육 휴지기제 대상농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자체 평가결과를 반영한 뒤 계열화업체와 협의해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정부 정책사업임에도 대상농가 선발권을 민간기업인 계열화업체에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까지는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했다.

오리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영욱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은 "계열화업체가 휴지기제 대상농가를 선정한다면 계열화업체로의 예측이 심화돼 농가교섭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열화업체와 지자체도 반대의 뜻을 냈다. 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계열화업체가 대상농가를 선정하면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계열화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냐"며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져야 할 책임을 계열화업체에 떠넘겨선 안된다"

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가의 협조 없이는 휴지기제 시행이 어려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농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와 계열화업체·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리농가들은 정부가 지침에서 밝힌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가 적용되는 4개월(11월~내년 2월) 동안 기존처럼 순수익의 80%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9월 중순부터 사육이 금지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상이 따라야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상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농가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 [2020. 9. 7]



DUCK'S NEWS

“올 겨울 고병원성 시 발생 가능성 크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시 항원 예찰 강화

올해 유럽과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시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저병원성이긴 하지만 시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들의 차단방역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지난 9월 1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다. 하지만 가금류에 대한 시 발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최근까지 전 세계 고병원성 시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유럽은 33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들은 2배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5년 사이 시가 발생치 않아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호주의 산란계농가에서도 시가 발생하는 등 올겨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저병원성이긴 하지만 토종닭 농가(4호), 산란계농가(1호)에서 시가 검출됐고,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지난 3월을 끝으로 검출되지 않았던 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년보다 빠르게 이달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에 축산차량을 출입통제시키고, 철새도래지 103개소의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시 항원 예찰을 대폭 강화, 검사 물량을 작년 동절기 대비 8% 이상 확대하는 등 한발 빠른 방역대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통상 10월부터 실시하는 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당겨 이달부터 시 방역 상황실 운영, 가금농장·축산시설 특별점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방역취약 임대농장 관리, 전통시장 방역강화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 가금관련 전문가는 “물론 그사이 재점검을 통해 많은 보완이 이뤄졌지만,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가금농가 일제점검결과 총 2천여호의 가금농가중 170여호의 농가가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는 등 최근 2년 사이 국내에 시가 발생치 않아 방역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시 유입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시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020. 9. 16]



October 2020

추석명절 축산물 청탁금지법 완화 ‘숨은 공로’

축산단체장들, 국민권익위 방문...위원장과 면담



추석명절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완화된 배경에 축산단체장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월부터 추석명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자, 축산업 관계자들은 모두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완화 배경에 축산단체장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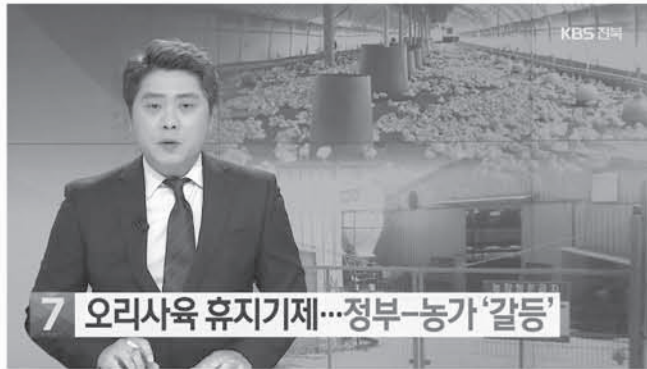
례없는 전염병의 확산 사태로 국내 농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부정부패와는 전혀 관계없는 농축산물이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상한액마저 적용됨으로써 국내 농축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극심한 소비부진의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이같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통해 청탁금지법의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축산단체장들은 “우리들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에 크게 감사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온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이번 추석명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020. 9. 17]

DUCK'S NEWS

오리사육 휴지기제...정부-농가 '갈등'



정부는,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겠다며 3년 전부터 철새 도래지 인근의 오리 사육을 넉 달 가량 제한하는 휴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상 농가 선정 방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째 오리 수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리사육농민, 농장이 철새 도래지인 고부천 인근에 있어, 두 해 전부터 겨울에는 오리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한 휴지기제 농가에 포함된 겁니다.

대신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지만,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리 공급부터 판매까지, 유통을 맡고 있는 계열화 업체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오리 사육 농민 : “회사에서 정말로 오리를 늦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민들에게 엄청 불이익을 줘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휴지기제 농가 선정에 계열화업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

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방역 목적에서 벗어나 계열화 업체 입맛에 따라 휴지기제 농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하담/한국 오리협회 이사 : “실제 쉬어야 할 농장은 쉬지 않고 또 안 쉬어도 될 농장은 쉬어야 되는 지금 방역의 의미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갈 염려가 있다는 거죠.”]

농식품부는 논란이 커지자 휴지기제 농가 선정 방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지자체에 전부 맡길지, 아니면 계열화 업체 의견을 일부라도 포함시킬지는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아직 (확정안이)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도록 다시 영상회의를 또 해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계열화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2020. 9. 21]

October 2020

면역력 강화 한 끼 '오리고기'

이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지금 면역력을 올리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다. 이맘때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오리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오리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이 만들어 주는 보양식이다. 무엇보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다이어트하는 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오리고기의 비

타민 A·B, 레시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노화 예방은 물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한 입 크기로 썰어낸 오리고기를 매콤한 양념과 갖은 채소를 넣고 구운 후 달콤한

단 호박과 치즈를 곁들인 맛있는 보양식 단호박 치즈 오리 불고기가 완성된다. 가족 건강 챙기는 가을 보양식으로도 좋지만 손님 초대 상차림 메인 요리로도 훌륭하다.

▶매경헬스 [2020. 9. 14]

겨울 철새 도래 경보 발령...시 방역 유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9월 2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가의 시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역본부는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목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9월까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시 발생은 562건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했다.

겨울철새를 통해 들어온 시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축산종사자 등을 통해 가금농가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겨울철새 도래는 경기·호남의 서해안지역에서 확인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왕송호수 등지에서 오리류 개체를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부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조해 철새 예찰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것”이며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2020. 9. 23]